

제주도 내 ‘군사기지 유치’ 담론을 통해 본 평화만들기의 정치학

이 보 라*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군사적 폭력과 평화의 개념이 해석되는 방식과 시각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제기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군사적 폭력(군사주의)에 대한 연구는 ‘폭력’ 자체를 동원과 배제의 메커니즘, 국가주의, 남성중심성의 맥락에서 바라봄으로써 강력함, 권위,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은 피해를 ‘증명’하거나(“고통받는 주민”), 피해자를 정치적 주체로 반등(反騰)시키는(“진정한 평화”) 방식으로 접근되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평화’의 개념은 본래 갖고 있었던 것을 잃었다는 맥락에서, 훼손시키지 않고 지키는 것(keeping)으로 의미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의 폭력과 피해의 구도는 이미 주어진 것, 미리 결정된 것이었다. 사실상 이러한 분석은 한국사회에서의 군사적 폭력이라는 것이 독재정권, 징병제, 분단 등으로 인한 경험과 해석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바당’마을에서의 군사적 폭력은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공포나 회유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군사기지(military base)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발전시설'로서 의미화 되고 있었다. 이는 군사적 폭력이 '적의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작동되는 한국 국방의 변화된 구조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폭력은 "~이 아닌 군대"라는 언설을 통해 부정되고, 주민들의 필요는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때문에 주민들 역시 보편과 원칙을 말하는 평화담론 보다는, 가장 지역화된(localized) 언어로 말하는 군사기지 건설 담론을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군사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지역들과 경쟁하기도 하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며, 폭력의 개념과 평화의 개념 역시 과정적인 의미로서(peace-making) 재정의·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당'마을 주민들이 국가와 대면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군사기지 담론에 전제되어 있거나 그 담론이 작동되는 효과로서의 폭력을 감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발견'을 통해, 제주도 '바당'마을 주민들은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주민 자신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부정 혹은 극복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소속양식과, 삶의 장소성(placeness)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군사적 폭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성과, 평화라는 것 역시 주민들에게 내재(內在)된 것이 아니라 인식과 발견의 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폭력은 특정한 시·공간에 따라 상황적으로(situationally)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이곳'에서 작동되는 폭력에 의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체와 땅-바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고 인식되어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본 논문에서 평화만들기(peace-making)의 정치학으로 의미화 하였다.

주요 색인어: 군사기지, 군사주의, 폭력, 장소성, 평화 만들기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군사기지(military base) 건설 예정지인 제주도 '바당'마을¹⁾ 주민들의 군사기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과정을 통해, 군사적 폭력이 형성·작동되는 과정에 대해 질문하면서 평화는 지키는 것(keeping)이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것(making)의 정치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바당'마을²⁾은 2007년 국방부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바당'마을은 2007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비율 56%로 제주도 내 다른 마을들보다 높은 찬성비율을 보여 기지 건설 '적정지'가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주민들의 투표 결과 투표참여자 중 94% 이상의 반대(총 725명의 투표 중 680명이 반대)로 '바당'마을회 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내걸었으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지반대운동을 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은 '바당'마을 주민들의 시간에 따른 입장의 변화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조건들이 이들의 견해를 바뀌게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근대 국민국가에서의 군사기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상징되는,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었다(Foucault, 1994). 군에서 제대하는 것이 "사회"로 복귀한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군이 '사회' 밖의 영역으로 인식

1) 본 연구는 마을을 알아 볼 수 있는 모든 명칭을 가명으로 하거나 무기명으로 기재한다. '바당'은 바다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며, 이 마을이 해안가 마을임에 주목해 '바당'마을이라는 가명으로 설정하였다.

2) '바당'마을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마을인데, 마을에 접한 바다에는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지가 있어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마을 내에는 서귀포시의 식수원인 '바당'천이 있어서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조건은 외부로 향해서는 자랑임과 동시에 주민 내적으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마을"이라는 자조(自嘲)를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제주도 내에서 특히하게도 전체 600가구 중 외지인이 3가구 밖에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바로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군사기지 '유치'를 가능케 한 배경이 된다.

되는 것의 대표적인 예이다. 군사기지는 대표적으로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 지대로서, 영토적 법칙 밖의 영토였다. 때문에 군사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와 해당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저발전·환경오염·군인들의 폭력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거나 국가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누적된 경험들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군사기지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사회로 편입하기 시작한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의 군사적 폭력은 무엇이 폭력인지도 구분할 수 없게 되거나(폭력의 비가시화),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나 폭력의 대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폭력의 경제화). 최근의 한국군은 이제 내부를 희생시키면서 무력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무력증강이 국민 내부를 살찌우는 방식의 (소)제국주의적 구조로 바뀌고 있다.³⁾ 때문에 기지건설론이 국가 외부를 향해서는 안보적 필요성의 강화와 군사력 확장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기지로 인한 피해보다는 경제적 효과와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 중심의 담론이 형성된다. 이런 조건 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군사기지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발전시설'로서 의미화 되고 있다. 군사적 동원의 논리가 포함과 배제의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⁴⁾

3)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이 이를 뒷받침 하는 대표적인 사건인데, 베트남 전사의 파병은 용병적 성격이 강했던데 반해, 이라크로의 파병은 '방위산업 강화'라는 한국경제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부의 결정이었다(우석훈, 2008a).

4) 전쟁이 삶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규율이 되고 있는 징후는 전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전투부대의 기동력을 높이고자 하는 효율화 방안은 군이 전투 이외의 업무를 민간업체에 아웃소싱 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피터 W. 싱어, 2005; 켄 실버스타인, 2007). 이렇게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민-군은 점점 더 긴밀함을 높여 가고 있고, 이는 군대를 안보논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탱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 추진과 한국군의 자체적인 부대감축으로 인해 군사기지의 민수(civil use) 전환 전략은 필연적인 것으로 합의되고 있으며, 이것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의 논의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필중·장현주, 2007).

이때부터 국익이라는 언설은 국가적 위상이나 대외신인도와 같은 추상적 지표를 염두에 둔 '국민'으로서의 발화라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주체로서 '개인' 혹은 '직원'의 이해관계에 따르게 된다. 이제 군사적 폭력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군사기지가 이렇게 지역 발전의 촉매로 제기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주체적으로 기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는 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틀(frame)과 질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을까? 안보문제는 영토적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당위와 방법의 문제이지만, 기지가 들어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효용성(경제적 가치)과 주민동의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된다. 이는 기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쓸모를 누가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대상, 한계에 대한 논쟁이자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住民)들의 삶의 양식과의 경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사기지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있는 도심에서 멀수록, 외질수록 '최적지'가 되기 때문에,⁵⁾ 이 문제를 땅을 기반으로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사는 곳과 삶의 방식이 자기(self)를 주조(鑄造)하는 주민의 사고방식은 군사기지의 문제를 구체적인 장소성(placeness)과 연결시켜 논의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이때의 장소성이란 '주민'들이 '지금-여기'에서 살고 있는 일상적 삶의 방식과 그 삶을 형성하는 논리에 주목하고자 하는 사유방식이다(김은실, 2004; Dirlik, 1999 ; 2005 ; Escobar, 1999).

제주도 '바당'마을 주민들은 "잘 몰라서 찬성하게 되었주"라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잘 안다', '모른다'는 언어는 말하자면 '잘 알게 된' 현재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언어이다. 본 논문은 '잘 몰랐던' 그때의 주민들의 선택과 그것의 의미, 또 '모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군사적

5) 군사기지의 증설이나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적인 구호로서 "기지를 청와대 옆으로"가 등장하게 된 것도 항상 가장 소외된 지역에 위험한 시설을 '떠넘기'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폭력의 변화된 양상, 그리고 점차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시야에 포착되는 군사적 폭력의 형태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폭력의 현장성과 이를 목격하는 주민들의 시선을 통해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진행된 제주도 해군기지와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 가장 크게는 ①기지 건설론자들의 입장에서, 군사기지를 경제적으로 치환가능한 시설로 바라보며 기지건설이 '바당'마을을 포함해서 '저발전'된 제주도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사고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립하는 견해로는 ②수난과 피해로서의 제주의 역사성 속에서 군사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입장이 있다.⁷⁾ 그리고 ③ '바당'마을과 제주의 '천연'환경의 훼손을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모든 발전 시설이든 군사시설이든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생태주의적 입장⁸⁾이 있다. 이 세 가지 담론들이 '바당'마을 수용에서부터 건설단계에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로 겹쳐지거나 경합하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발전론자들은 '바당'마을과 제주도의 낙후성을 근거로 '미래'를 부여하고, 평화론자들은 피해 입은 역사의 단선적인(linear) '과거'를 통해 주민들의 현재를 규정하며, 생태론자들은 주민들을 자연환경과 동일시하며 이들의 물질적 관계와 역사성을 탈각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의 기저에는 주민들이 땅-바다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때의 관계란 완전히 경제적으로 교환가능한 대상으로서 말해

6) 실질적으로는 군사기지 건설의 당위를 국가안보 입장에서 제기하는 국방부의 입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의 담론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질 못하고 경제주의적 입장만을 부각시켜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7) 고유기(2006), 양길현(2006), 이시우(2008), 구갑우(2007), 조성운(2008).

8) 윤용택(2007), 제주환경운동연합(2008). 특히 생태주의적 접근방식은 가장 규범화되기 쉬운데, 현상이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관계없이 답은 '이미-항상' 정해져 있는 담론구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태주의적 접근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정치적 자원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지속적인 호응을 얻긴 힘든 측면이 있다.

지거나, 땅과는 분리된 역사 속의 존재로서 인식되거나, 아예 땅-바다와 같은 존재로서 동일화 된다.

이들 담론들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의 의미를 원칙·지향·당위·규범이라는 보편의 지위를 가지고 주민들을 향해, 혹은 그들을 대신하여 말해지게 된다. 동시에 이들은 군사기지 건설론에 대해 각각 찬성-반대라는 폐쇄된 영역을 구축한다. 즉 기지에 '찬성'하는 것은 "마을의 발전을 위한 것 vs 마을을 팔아먹는 것"이고, '반대'는 "평화를 원하는 것 vs 현실을 모르는 것"으로서 각각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언어 속에서는 주민들이 마을발전을 원하지만 또 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거나 이해될 수 없는 것, 즉 정치적 돌출일 뿐이었다. 특히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의 폭력에 대한 피해와 저항 중심의 서술은, 주민들이 무언가가 결핍(lack)되어 있고 그것에 저항하는 때에만 말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그렇지 않은 무수한 말들은 말해질 공간을 잃게 된다. 이는 군사적 폭력이 “~이 아님”이라는 식의, 폭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마을에 정착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욕망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가로막는 사유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주민들의 입장을 해석함 있어서 “억압 → 피해의 경험 → 정치적 주체화 ↔ 저항”으로 이어지는 담론적 구조는 생산되면 될수록 오히려 주민들이 고립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억압과 피해의 경험이라는 물적 조건으로부터 주민 정체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항은 1차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타자의 몫이고, 그래서 이는 고통과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위계화 되어 배치된다. 때문에 경험은 독점되고 경험에 기반한 저항 역시 타자에게 떠넘겨진다. 이로 인해 주민이란 항상 문제해결의 '대상'("고통받는 주민")이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진정한 평화")이었지, 질문 자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장(場)을 바꾸는 존재로 가시화된 적은 거의 없다.

이것은 폭력-평화, 국가-주민, 인간(문명)-자연, 서울-지방의 이분법을 위계적으로 대립시키면서 전자에 의해 후자가 정의(definition)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유방식이다. 그리고 후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평화, 주민, 자연,

지방 등의 범주는 언제든지 치환가능한 것으로 위치지워진다. 바로 이러한 논리구조를 통해 “군사기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과 주민을 파괴하는 악(惡)”이라는 담론이 탄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평화란 주민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것을 잃었다는 맥락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keeping)으로 의미화 되며, 이때의 평화는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기 위해 질문해야 할 것은, “주민이 어떠한 존재이며, 마을이 얼마나 평화로운 공간이었나”가 아니라⁹⁾, 그러한 주민의 존재와 ‘바당’마을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가이다. 즉, ‘바당’마을의 ‘주민’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은 제주도민의 문화와 역사를 정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라는 것, 그 속에서의 ‘제주도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바당”마을 주민’에 대한 질문은 곧 마을 밖 ‘우리’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또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정의해가는 폭력과 평화의 개념은 평화와 폭력이 마치 선-악 구도처럼 여겨지는 기존의 이분법적 범주를 해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군사기지를 욕망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기지 반대’를 외치는 시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이라는 주민들의 일관된 입장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의 경합에 따라 변화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적 준거인 땅-바다와의 관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 국가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민들은 ‘제대로 된 국가’를 요구하고 그 국가와 마을에 대한 성원권(주민됨의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막혀있는 모순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peace-making) 가능성으로서 의미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당’마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원이 되게 되었던 그 전도(顛倒)된 기원의 현장성을 포착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목소리들을 의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은실, 2008: 157). 위로부터의 규정이거

9) “주민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물음은 주체의 지식생산을 위해 주민(토착민)을 타자화하며 ‘관찰’하였던 서구의 초기 인류학적 시선과도 겹친다.

나 자본, 민족-국가 등의 관계에서 위치가 없는 추상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장소(place)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논리와 이와 부딪히는 주민들의 매일의 삶을 조직하는 논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으로서의 문화번역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은 현지조사(fieldwork)와 심층면접, 그리고 참여관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현지조사는 연구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자의 적극적 개입이 전제되는 방법이다(Reinhartz, 1991). 이러한 방법은 군사기지 건설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바당'마을 주민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군사기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민족지적 방법론에서의 핵심은 '연구대상(타자)과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통해 비롯된다. 원래 문화번역은 최대한 면밀하게 사람들의 집단적인 생각과 의식을 연구한 다음, 다른 문화의 이국적 개념을 서구 문화 안에서 등가의 개념으로 옮기는 것을 뜻했다(데이비스, 2005: 147). 하지만 이는 타자의 차이를 '이국적(exotic)'이라는 수식어로서 본질 회함으로써 타자와의 위계를 재생산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문화(異文化)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타자는 '저기 바깥'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그 문화는 시간과 역사적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 정지된 상태로 보여졌다. 이는 문화 횡단에 필수적인 문화들의 동시대성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자의 문화를 불변하는 실체로 보는 '몰시간성의 환상'이라는 인류학적 수사학은 결국 '문명적 격차'를 구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Fabian,

1983: 32-8).

때문에, 제주도 '바당'마을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타자화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3의 영역으로서의 문화번역(translation of cultures)의 방법론을 차용하고자 한다. 문화번역이란 번역을 단순히 언어와 언어만이 아니라 매체와 매체, 문화와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환의 과정으로 그 지평을 넓힌 것이다(로잘도, 2000). 또한 번역이라는 것은 특정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위라는 점에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읽고', 그것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수행성의 맥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현미, 2001: 136).

이는 연구자는 입장을 가진 주체(positioned subject)로서, '바당'마을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위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한 일련의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연구하는 과정은,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연구대상으로부터 변형된 자신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또한 연구자가 주민들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자 자체가 주민들과 공재(共在)한다는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연구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주민-되기'를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얻어질 수 있었다. 민족지는 대화로서 구축되는 것(클리포드, 2000: 194)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시간대를 주민들과 맞춤으로써, 그때 발생하는 정치적 긴장, 충격, 새로이 알게 되는 사실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변형된 연구자의 몸(body)이 곧 논문의 내용(body)으로 구성된 것이기도 하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현재 '바당'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40-80대 주민들이다. '바당'마을 주민들이 군사기지와 마을발전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를 갖는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를 연령, 생업형태, 보상여부, 기지건

설에 대한 태도(찬성-반대) 등에 따라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조 참여자는 주민 외의 관계자들로서, 관련 기관 공무원, 현역 해군,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지조사는 '바당'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 덕에서 3개월(2008년 6월~7월, 9월~11월) 동안 거주하면서 진행되었다.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관련 NGO단체들의 행사(마을회의, 캠페인, 지역 평화축제 등)에 거의 대부분 직접 참여하면서 참여 관찰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마을에서는 현안과 관련해서 일주일에 2~3차례씩 마을 전체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자는 이 회의를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내부의 상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현지조사와 참여관찰한 내용들을 매일 기록하고 그 상황의 맥락을 잇기 전에 매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제주어를 배워서 대체로 제주어를 통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내용의 인용도 주민들이 쓰는 제주도 사투리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다. 대신 서울어 번역을 병기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 례	성 별	연 령	경 작 형 태	기지예정지 내 땅 소유 여부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	비고 (권당관계)
1	남	57	자작	없음	찬성	기지유치위원회
2	남	49	자작	없음	찬성	기지유치위원회
3	남	52	숙박업소 운영	없음	찬성	기지유치위원회 위원장 /前 마을회장
4	여	68	자작	있음	찬성→반대	20세 때 결혼해서 '바당'마을로 이주
5	여	60	소작	없음	반대	
6	남	65	소작	있음	찬성→반대	
7	남	44	자작	없음	반대	반대대책위원회 집행국

사례	성별	연령	경작 형태	기지역정지 내 땅 소유 여부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	비고 (권당관계)
8	남	85	자작	없음	반대	전 노인회장
9	여	62	잠업(하군) /자작	없음	중립→반대	24세 때 결혼해서 '바당'마을로 이주
10	여	52	잠업(상군) /자작	없음	찬성	해녀회 부회장 / 22세 때 결혼해서 '바당'마을로 이주
11	남	41	자작	없음	중립→반대	
12	남	52	자작	있음	찬성→반대	전 마을감사
13	여	61	자작	없음	찬성→반대	24세 때 결혼해서 '바당'마을로 이주
14	여	62	잠업(하군) /소작	없음	찬성→반대	
15	남	52	자작	없음	반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16	남	40	소작	없음	중립→반대	
17	여	52	자작	있음	중립→반대	
18	여	52	잠업(상군)	없음	찬성	해녀회 부회장
19	남	71	소작	없음	반대	
20	남	41	식당운영 /자작	없음	중립→반대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표 2〉 보조참여자의 특성

사례	성별	연령	직위	비고
A	여	46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특보	여성단체 전 대표
B	남	52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공무원	서울 공공기관에서 10년 동안 근무
C	여	31	제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사례	성별	연령	직위	비고
D	남	40	제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E	남	37	제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F	남	24	현역 해군	'바당'마을 상주 군인

* 잠업은 해녀들이 작업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물질의 경력·실력에 따라 상군/중군/하군(하군은 주민들 사이에서 '톨파리'로 불린다)로 나뉘고, 각 군에 따른 해녀의 수도 피라미드 구조로 어느 마을이든 상군 해녀수가 제일 적다. 상군 해녀는 해녀회에서 더 큰 발언력을 갖는다.

** 연령과 직위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2008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Ⅲ. 군사기지가 욕망의 대상이 되는 맥락

1. 폭력이 배제된 군대: “~이 아닌 군대” 라는 담론

과거 한국사회에서 군사적 폭력은 집단적 동원체제와 그로 인한 선택과 배제의 문제가 핵심적이었다. 군사적으로 강하고 부유한 근대적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 북한이라는 강력한 '주적(主敵)'의 존재 속에서 국민국가라는 개개인들을 '국민'으로 호명하고 집단의 공동운명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 운명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처벌과 권리박탈이 이루어졌다. 반공은 '국시(國是)'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글로벌 자본주의로 본격 편입되면서 군사적 폭력이 작동되는 양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취업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병역-국민정체성-시민권의 강고한 연결이 점차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 또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동북아중심국가'를 구현하게 되면서, 이에 걸맞는 경제시스템과 안보시스템을 갖추고자 하였다. '제3세계'로의 시장 확장과 함께 동북아의 무기경쟁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¹⁰⁾ 내부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한국 경제는 절실히 해외 시장과 해외 자원을 갈망함과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지키는 주체' 혹은 최소한 '의지와 관계없이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는 국가11)'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껏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정치경제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는 국방력의 강화가 국가 내부의 희생을 토대로 삼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여타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외부로 확장해야만 내부가 생존할 수 있는 구조이다.¹²⁾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은 국제정치와 전쟁의 규칙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과거 광범위한 군사 및 안보 서비스가 정부의 공적 책임에 배타적으로 속해 있었던 반면, 이제는 민간군사기업이 군사 및 안보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피터 W. 싱어, 2005). 때문에 기존의 여성주의 평화연구에서 군사적 폭력이 위협의 추상성을 통해 국민을 동원한다고 지적한 것(Cohn, 1987; Scarry, 1985; Hartssock, 1989)과는 다르게, 군사기지외에도 같은 군수시설은 더 이상 안보 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 '적의 침략'이라는 거창한 정치적 명분을 굳이 동원하지 않아도 가장 삶과 밀접한 언설인 '먹고 살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10) 한국은 지난 5년간(2005~2009) 전세계 3위의 무기수입국이다(SIPRI, 2010).

11)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중.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2005),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p.35 참조.

12) 그리고 이러한 국가정책에 국민 상당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통해 봤을 때, 이는 상층정치에서 뿐만은 아닌 개개인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우석훈(2008a)은 2004년 이라크 파병, 2004년 한류 열풍, 2005년 황우석 사건, 2007년 심형래 감독의 디워(The War) 열풍, 등이 그 대표적인 징후라고 분석한다. 특히 이라크 파병은 '국익'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국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의 자체가 파병과 전쟁이라는—일반적인 경제적 범주에서는 잘 포함되지 않는—특수한 관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현상이다. 이익이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전히 대의와 명분 같은 것으로 참전 혹은 파병 같은 일을 결정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제국주의적 한국의 정치구조와 이를 뒷받침 하는 국민여론을 분석하고 있다.

군사적 폭력이 작동되는 방식의 변화는 군사기지가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인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에게 “(안보를 위해) 참으라” 하는 대신, 오히려 “(달라졌으니) 믿어 달라”고 설득한다.¹³⁾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해당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지역화된(localized) 언어로 말을 거는 것이다.

김○○ [해군기지 사업단의] 단장도 나한테 얘기를 했듯이, “바당”에는 최~근래에 해군기지가 생길거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군기지를 만들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면 일본이나 이런데 못지 않게서리 자기네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 그리고 [토지주들에게 하는 말이] “토지를 팔아주지 않으면 전체 바다를 매립해서 건설하겠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하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가서 반대측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십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례 12>

‘바당’마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친환경 관광 미항 기능 갖춘 세계적인 해군기지”¹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전에 없던 기지’(이서향, 2003; 대한민국 해군, 2002)라는 이름을 통해 여타 다른 지역의 군사기지(군사권력)와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은 단지 수사(rhetoric)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권력의 실물적인 변화도 뒤따르고 있다. 군사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병영시설·주거 및 복지시설·훈련장 등을 혼합하는 ‘주둔지 시설의 패키지화’¹⁵⁾ 정책이 그 예다.

13) 이는 2006년 용산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만들어낸 사회적 과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안보를 위해서는 평택이 참아야 한다”는 논리로 대추리·도두리 마을을 일방적으로 파괴했는데, 그럼에도 주민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은 국방부가 엄청난 보상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4) <국방일보> 2008년 4월 2일자 기사, “해군기지는 ‘친환경 관광 미항 기능 갖춘 세계적인 해군기지’”.

15) 이는 과거 군 독자적인 계획수립에서 탈피하여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효

우리 마을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해군기지를 유치함으로써 해군기지가 정말 제주의 관광에 부합되는. 그래서 뭐 돌담도 우리가 지시한게 처음에는 제주도 돌담으로 해라, 했다가 그러지 말고 돌하르방으로 해라. 돌담 전체를 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인조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돌하르방을 주물로 떠갖고 여러 가지 형태. 얼굴 뭐 하늘 쳐다보는 사람 옆을 쳐다보는 사람, 어깨동무 식으로 해서, 주물로 떠서 이제 벽돌처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해군기지가 아니고, 기지가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관광지구나”, 그런 생각이 가게끔. 건물 형태도 제주 오름에 맞는, 제주 오름은 다 그 할아버지 머리처럼 아주 완만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 자체도 제주도의 초가지붕처럼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고. <사례 1>

<사례 1>에서 보여지듯 군에서는 군사보호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마을의 공유지로 전환하면서 군의 시설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도 있다. 군사보호구역의 ‘철조망’으로 상징되는,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통제와 차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돌하르방’과도 같은 지역 특유의 상징물들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군사기지와 관광지라는 이미지 상 양립불가능 했던 시설들이 경합적인 것이 아니라 ‘관광시설로서의 기지’라고 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었다.¹⁶⁾

과도 달성하고자 하는, 군 입장에서는 ‘인식의 대전환’이라 평가받을 정도의 변화라고 한다(김영득, 2007). 실제로 해군본부에서 홍보하는 해군기지는 흔히 ‘기지’하면 떠오르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자연친화적인 기지’를 모토로 삼으면서, 해양공원, 교육/문화센터, 체육/복지시설 등을 기지 내에 갖출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로 홍보되고 있다. 해군본부(2007), “해군기지 사업추진계획”.

- 16)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기지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다. ‘제3세계’의 군사기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미국과 일본의 기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지 투어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군사기지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되고 있다. 또,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주민들과 ‘이웃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필리핀 반기지활동가인 Ms. Fabros (Nuclear

한편 한국이 전쟁에 참가하고 군사기지를 증설하는 것이 과거처럼 권위주의 정권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민주적이며 철차적으로 하자없이, 그야말로 “국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제주도 해군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외적으로는 제주도 전역과 특정 세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¹⁷⁾ 그리고 그 중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던 ‘바

-Free Philippines Coalition)의 문제제기는 현재 군사기지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설정해야만 함을 시사해준다.

“미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경우, 오키나와에서는 사람들이 미군기지와 함께 살아나 가기를 이미 배웠다. 미군기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삶의 일부로 되었다. 미군기지가 주민들의 집과 이웃해 있었다. 그 결과 오키나와에서는 기지반대운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필리핀에서 기지반대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기지에 대한 필리핀 사람들의 접근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오키나와 아시아민중안보회의> 발표(2000년 7월) 내용 중(이삼성, 2007: 23~4에서 재인용).

오키나와의 반전지주(反戰地主)는 전체 지주의 10%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이 군용지 이용연장 계약을 할 때, 오키나와 지주들이 미국에 그들의 토지를 빌려주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지주들 사이에는 미군이 철수하면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손해라는 의식이 광범하게 퍼져있고, 이러한 현상은 오키나와의 군사화를 영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물적 토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정연신, 2008).

- 17) 철차적 정당성과 지역개발의 명분을 다 갖추고 있는 기지건설론은 1999년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반환문제와 너무나 닮아 있다. 나고 시 시장은 헤노코 연안지역에 대체 헬리포트 건설을 용인하였는데, 이는 ‘미군이 강제 접수한 기지’에서 ‘오키나와가 제공하는 기지’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이것이 한국사회에도 유명해진 소위 ‘헤노코 반(反)기지 운동’의 배경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정책결정 과정이 ‘오키나와의, 오키나와에 의한, 오키나와를 위한 결정’인 듯한 모양새를 띄고 있으나, 이것의 한 축은 일본 ‘본토’보다 훨씬 심한 개발주의의 맥락에서 제기된 점이라는 것이다. 오키나와가 본토로 ‘복귀’한 1972년은 전후(戰後)의 ‘황금시대’가 끝나고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이행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 무렵부터 토목·건축 등 소위 ‘ハコモノ(箱物, 건물) 행정’이라는 공공투자예 의존한 토건국가의 구조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뒤쳐진 오키나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낸 이권의 경합지로서 본토 기업의 거액 투자 대상지가 된 것이다(강상중·요시미 순야, 2004: 198~214).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군사기지를 둘러싸고 이를 제기한 주체와 그들이 제기하는 논리구조는 현재 제주도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키나와는 현재 냉전 이후 지속된 ‘기지체제’로 인해 기지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기지가 이렇게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된 이상 일방적인 기지철수운동은 허무한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이는 곧 제주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으며, 때문에 현재 제주의

당'마을이 '적정지'가 된 것이다.

군대가 어디 예전 같나요? 우리는 이 동네 ['바당'마을]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죠, 소비자. <사례 F>

현역 해군인 <사례 F>는 자신들을 “소비자”로 지칭하였다.¹⁸⁾ 기지가 들어오면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이나 그 밖의 마을에 있는 시설들을 (돈 주고) 이용하는 구매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가 위협과 강제력을 동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던 것과는 달리, “소비자”라는 말 속에는 군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삭제된 채로, 합리적인 행위자(agent)로서의 이미지만 드러내게 된다.

군사기지 문제는 국민국가 안에서의 문제설정을 넘어서 식민지적 기억을 공유한 동아시아 체제 속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 18) 물론 <사례 F>는 연구자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지나가는 말로 “해군도 힘이 없어서 경제성을 제기한 거죠.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논리에서 밀리면서 그렇게 된 거죠. 발목 잡혔어요. 찬성 주민도 위원장[찬성측 주민 대표] 빼고는 모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변화된 안보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섞인 반응으로, 그만큼 국방의 논리는 안팎으로 변화를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독점적 권위가 점차 경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국가적 입장에서의 안보론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작동되었던 반면, 현재는 <사례 F>가 말하는 태도처럼, 그 말이 일방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이와 같은 말들은 주민을 향해서는 절대로 말해지지 않는다). 실제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초창기(2002년)에는 제주도에 대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제주도의 안전이 증진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군사전략적 유리함과 해상교통로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국익론’과 ‘안보론’을 주요하게 주장했었다(이서향, 2002; 장정길, 2002). 또, “○○항 해군기지 건설이 끝나는 2010년 이후 중·일과의 갈등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다면, 원거리 대공방어와 탄도탄 방어능력을 갖춘 첨단전투체계인 이지스함을 배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다(2002년 8월 해군본부 설명회).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런 담론들이 설득력을 잃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들은 변화된 안보관을 걱정하는 ‘혼잣말’이거나, 군인들 상층부만이 모인 자리에서의 내부 언어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방담론의 언어는 점점 더 이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주의의 문제를 상층담론 중심으로 연구해서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주목할 것은 군인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가 아닌 군대”라는 언설이다.¹⁹⁾ “~가 아닌”이라는 말 속에 존재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이에 대한 기억과 우려, 더불어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는 군사적 폭력의 내용에 대한 부인이다. 이로써 2000년대 이후 처음 건설되는 군사기지와 이를 둘러싼 폭력은 과거를 단절하고 부인함으로써만 곧 자신이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당’마을에 작동되고 있는 군사적 폭력은 이전에 실행되었던 폭력이 위기에 처한 바로 그 국면으로부터 (대내외적인) 변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기로서의 정체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 폭력이 과거 폭력적 경험과의 불일치의 반복으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가운데, ‘바당’마을의 군사기지 계획이 서 있다.

실제로 ‘바당’마을이 예정지로 선정된 초창기부터 군인들은 주민들과의 협상의 전면에 잘 나서지 않고, 기지에 찬성하는 주민이나 도청 공무원들이 이들의 견해를 대리(代理)하곤 했다. 이는 군대가 아무리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 이상의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폭력은 부인되고 주민들의 필요는 충족시킴으로써, 군사적 폭력이 욕망되는 사회를 구성하는 힘은 바로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

2.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상상으로서의 군사기지

군사기지 건설에 찬성한 주민들은 인터뷰에서 ‘바당’마을을 “아파트 없

19) 구체적으로, 국방부 측이 주장해 온 내용의 말의 형식을 정리해보면 이렇하다. “마을 내에 기지 외곽에 군사보호구역은 설정하지 않을 것이고, 공군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군만 사용할 것이며, 미군기지화 되지 않을 것이고, MD체제의 일환이 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과 무관하다.” 그리고 기지가 건설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설로 ‘안심’시킨다. “기지주변 해역 어로활동 보장, 방파제 외측에서 해녀들의 나잠어업(물질) 보장”. 해군본부(2007), “제주 ‘바당’마을 해군기지 사업 추진 계획”.

음, “살 방법 없음”, “(도로가 없어서) 돼지우리 같이 꼭 막혔음”, “갑갑함” 등으로 묘사하였다. ‘바당’마을 외부에 도로나 시설이 있다면 이 마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결핍(lack)’의 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마을을 ‘결핍’된 것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주민-외지인과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결핍’은 대체로 외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선망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해진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대한 ‘결핍’은 곧바로 외부 대상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의 ‘결핍’과 외부에 대한 선망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된다.

그런데 기존의 평화담론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대해 가지는 불만과 그로 인한 군사기지에 대한 지지를 “현실을 잘 몰라서(=알게 된다면 반대하게 될 것)”²⁰⁾, 혹은 “군인의 말에 속아서(=‘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것)”²¹⁾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는 주민을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는 담론과 동일한 전제를 공유하는 것일뿐더러, 찬성했던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고 난 뒤의 상황만을 다룬 결과주의적인 해석이다. 이에 반해 지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평화담론에 의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진정한’ 평화의 체현자)”들로 말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결핍’은 자동적으로 ‘진정함’으로 바뀌어져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진정한’ 순간은 그들이 무언가를 ‘결핍’하고 있을 때라야만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²²⁾

20) 오키나와의 군사기지와 ‘바당’마을의 해군기지 문제를 엮어서 다룬 <국경은 없다> (김환태, 2009)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에서 있었던 한 평화운동가의 말 중에서. “찬성하는 분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바당’마을에) 이지스함이 들어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잘 살게 된다는 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21) 이는 제주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이 연구자에게 해준 말이다. “지금 ‘발전’ ‘발전’ 그러면서 군인들이 주민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주민들은 그거에 다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운동이 힘든 거예요”

22) 때문에 그 ‘결핍’을 메우고자 땅을 팔고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은 외부자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이미지를 배반한다. 이렇듯 약자의 욕망은 ‘진정성’을 기대하는 외부자들에 의해 종종 차단된다(Gareth Griffiths, 1994). 그리고 이러한 외부자들의 담론은 역설적으로 주민(토착민)들이 현재의 삶이나 완전한 시민성과 단절하는 효과

하지만 왜곡과 신성화는 동일한 상징적 질서에 속한다. 이러한 대상화(objectification)는 지배담론의 전제들을 반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담론이 주민을 소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주민들이 알고/모르는 현실이나 진실이 따로 있다는 것은 실제 그것의 진위여부를 떠나 군사적 폭력이 작동되는 양식 '저 너머(over there)'에 있는 입장에서 구성된 사유방식이며, 이 구도 속에서의 '주민'이란 알리고 설득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를 통해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여기(now-here)'가 아닌 '어디에도 없는 곳(no-where)'의 관점에 의해 위계적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물어야 할 것은 주민들이 '발전'이라는 외부를 얼마나 욕망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비판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 현재의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것이다(김은실, 2008: 180). 즉, 군사기지를 원하게 되는 욕망은 현재의 무엇을 말하기 위한 진술인가 하는 물음이 필요한 것이다. 평화담론이 전제하는 군사적 폭력에 대해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기반한 지식인 것일까? 찬성-반대를 막론하고 '바당'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처음에 기지란 건 잘 몰랐주께"라고 말하는 그 상태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의 논의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군사적 폭력에 대해 '잘 모름'에도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바당'마을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자기인식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마을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구성된 주민들의 욕망이 군사기지에 대한 찬-반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제주도 내에서 계속되어 왔던 특정지역 중심의 발전 방식은 '바당'주민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제외되었다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였다. 더구나 '바당'마을은 마을 내에 있는 유원지로 인해 15년 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에 대한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던 상태였다. 때문에 군사기지로 인해 마을에 새로운 사람과 시설

를 낳는다. '진정성'은 이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타자성에 대한 강조는 고립과 본질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Diana Brydon, 1991).

이 들어온다는 소문은 '바당'마을 주민들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지가 들어오다 보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고 가고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와서, 꼭 우리 동네가 아니더라도 제주도에 와서 뭐 밥 한 그릇을 사먹는다면, 밀감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선물을 한다, 그러면 지역에 와서 돈 좀 쓰고 그러면 나아지지 않을까. 외부사람들이 많이 많이 왔다갔다 하셔야.
<사례 18>

<사례 18>에서 볼 수 있듯 기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군사기지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결국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의 반영이다. 즉, 외지인-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들이 외지인이 가진 것과 '자리바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좀 더 나은 삶'을 구성하는 조건으로서의 항목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좀 더 나은 삶'이란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²³⁾, "감귤 장사가 좀 더 잘 되는 것", "상주인구가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군사기지라는 외부적 변수가 갑작스럽게 등장함으로 인해 자신의 마을을 '~이 없는' 마을로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군사기지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시설로서 한정된다. 마을의 '결핍'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선망이란, 이러한 의미들로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마을발전을 위해 군사기지에 찬성한다"라는 말로써 통합된다.

23) 현재까지 '바당'마을의 교통수단은 1시간에 2~3대 정도 다니는 시내버스 한 노선뿐이다. 병원, 약국, 시장 등의 생활시설들은 모두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이 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나 남성들은 자가용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대체로 이 버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이동하는 데에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다.

Ⅳ. 폭력의 '발견'

1. 주민이 대리(代理)하는 폭력

군사기지 건설 계획이 마을에 거론되기 시작했을 초창기에는 주민들 대다수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찬성'의 견해를 가졌었다. 그리고는 前 마을회장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바당'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할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마을에서의 유치안은 어촌계, 해녀회, 마을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7년 4월 26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前 마을회장> 바쁜 시간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죄송하다. 해군기지의 장소선정이 4월 말까지라 시급하다. 이런 기회가 일생에 한번 올까말까 한 일인 것 같다. 화순은 반대하다 지금은 유치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한다. 화순과 위미가 하지 않은 해군기지를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일일이 만나서 대화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오늘 결정을 하여 내일 마을 회의를 거쳐 신청을 하는게 시급하여 더 많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

<강○○> 위미나 화순에서는 3년에 걸쳐 반대하는 해군기지 유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前 마을회장> 국방부에서 위미항에 해군기지로 인해 누리는 혜택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을에 유치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해군기지의 조성으로 우선 병원이 생겨 해녀 여러분의 잠수병 등 누리는 의료시설과, 넓어지는 도로망 등 엄청난 발전이 기대된다. 그래서 해군기지 선정지가 4월말까지 결정되므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선 해녀 여러분과 어촌계원들이 먼저 동의를 해야 [전체] 마을회의를 거쳐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략)

<정○○> 해군기지 유치신청을 했다가 보상이나 그 외 마을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반대를 할 수 없느냐?

〈前 마을회장〉 가능하다.²⁴⁾

이 회의기록을 보면, 기지 유치를 제안했던 前 마을회장은 “일생에 한번 올까말까 한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이는 다른 마을들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은 해군기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화순과 위미의 두 마을에서 이전에 반대했던 것²⁵⁾에 대한 불안과 前 마을회장 말대로 ‘기회’일 것 같기도 한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前 마을회장이 계속해서 “시간없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날 모였던 주민 86명은 만장일치로 기지유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 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기지 유치를 이끌었던 마을회장과 그 밖의 마을 주요 구성원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자, 이를 본 주민들은 마을이 갑자기 외부와 ‘공식적으로’ 연결되면서 이것이 자신의 결정권 밖의 문제로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집에 왕(와서) 텔레비전만 보는데, 4월 26일날 마을회 할 적에, 86명 참석한 거를 150명인강 참석했던 해서 [도청에] 등록했드라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야. (중략) 윤○○[전 마을회장]이는 번듯이 나선(나서서), “우리 부락으로 와주십서, 그렇게 하느디 [기지를] 안 밀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반대가] 힘드느 거야, 우리 부락에서. 그 뒤에 앉은 사람 해너도 보이고. 계난 난 접수를 해야되던 막 해도 접수를 허면은 우편으로라도 보내는 줄 알았지 그렇게 도청까지 찾아가서 뭐 딱 나서서 마이크 잡고 “우리 부락에 와주십서, 그렇게까지 할지는 몰랐었거든. <사례 14>

24) 2007년 4월 25일 어촌계 총회 회의 녹취록, pp.1~3.

25) 제주도 해군기지는 ‘바당’마을이 대상이 되기 전 여러번 ‘적정지’가 바뀌었는데, 2002년에는 화순이, 2005년에는 위미가 건설예정지로 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바당’마을까지 오게 되었다.

더구나 <사례 14>의 지적대로, 마을회의에 모인 인원은 86명에서 150명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같이 생활하던 주민들이 도청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낯선 모습'은 마을에 들어오는 군사기지의 폭력을 어렵듯이 느끼게 한다. 또한 어촌계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前 마을회장이 기지를 '유치'하는 '기회'의 맥락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이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마을에 와 주십서"라는 말처럼 기지건설을 '요청'하는 맥락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는 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는 그 주체가 '주민'인 자신이 아니라 '요청'을 듣는 권력(도청 및 해군본부)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마을에서는 마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4월 26일날 총회가 만장일치 박수를 통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절차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지]반대위 출범을 해서 5월 21일날 이 자리[마을회관]에서 前 마을회장과 협상을 했수다게. 우리는 절차적인 측면을 요구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는 첫번째가 찬반전문가를 모시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자, 2번째는 찬반전문가를 모시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듣는 청문회를 하자, 3번째는 찬반전문가, 찬반주민 동수, 언론인을 모시고 전국해군 기지를 실사하자, 4번째가 실사내용을 보고하자, 그리고 주민투표하자, 결과에 승복하자, 차후에 일을 서로 의논하면서 하자, 그런 식으로 아주 민주적인 절차로 잘 할려고..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디다. 그래서 그때 긴급히 내 놓은 7번째 제안은 해군기지 문제는 서로 추진하지 말고, 추진하게 되면 상호 의논에 의해서 추진하자, 요거만 합의가 됐는데, 이 사항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뭐 대통령 올 때 도지사하고 같이 나가서 "바당'에 해군기지 건설해주십시오", 건의를 했고. 그런 합의과정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前 마을회장에게 마을향약 규정에 의해서 [마을회장 해임건으로] 마을총회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중략) 그때까지, 8월 20일까지 우리 내부에서 4월 20일

날 총회 절차를 뒤집기 위한, 한 마디로 진짜 피나는 싸움이라고 봐야 되죠. <사례 15>

<사례 15>를 비롯한 이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주민들은 前 마을회장과 관계된 주민들을 모아놓고, 최대한 외부인들(도청, 해군본부, 시민사회단체)은 배제한 상태에서 주민들끼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지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前 마을회장 측에서는 이러한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 대신, “대통령 올 때 도지사하고 같이” 의견을 맞추는 것을 택하였다. 이것은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에 걸맞는 역할(주민들 간 합의)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 이를 무시함과 동시에 외부의 힘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이때부터 이를 뒤집기 위한 “진짜 피나는 싸움”을 불러일으켰다. ‘기지에 찬성한다는 것’은 초창기에 알려진 것처럼 자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당’ 마을의 ‘주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마을 내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주민들(대체로 나이 많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론이었다고 한다면, 6월 19일 주민 투표일에는 마을 내 대부분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폭력을 느끼게 한 계기가 되었다.

6월 19일날 총회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 줄은 몰랐는데 막 700명 정도 뭐 왔다고 했는데, 그때 총회 때 모여서 [총회가] 무산이 돼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안 하고, 마을 감사가 회의 소집해서 이장[前 마을회장]이 회의 시작하자마자 싸움 붙은 건데, 마이크를 뺏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말썽이 나자, 마이크를 빼앗았고, 해녀들이 기표소 부셔서 탈취해서 도망가버리고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회의실이. 일차적으로 그 아수라장이 되어서 한 시간 이상 그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감사가 “회의진행을 잠시 중단 하겠다” 그러면서 그 밤에 서귀포에 있는 인쇄소 가서 투표용지 가서

만들어 와서 재투표를 할려니까 또 다시 [찬성주민들이] 막아서가지고 못하게 했거든요? 못하게 해서 무산됐고. 그러자 감사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수다게. 밤 12시가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반대에서는 “이제는 돌아가십시오”, “우리 투표종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포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좌석에서 해군기지 반대 서명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만 400명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 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느꼈고, 찬성측에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심으로 더 많이 참석했을 걸로 보는데. (중략) 왜냐면 사실상 저희도 해군기지에 대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례 15>

이런 절차적 과정에 대해 문제를 느낀 주민들의 제안으로 2007년 6월 19일 해군기지에 사안을 마을 전체 찬반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투표 당일 찬성측 주민들이 기표소를 부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소동까지 벌어져, 결국은 투표가 무산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일은 해녀들과 기지유치에 앞장섰던 몇몇 젊은 남성들이 주도했는데, 주민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해녀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기획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해녀 뒤의 힘’을 느끼게 된다. 눈앞에서 벌어진 해녀들의 행위는 ‘주민’의 정체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뒤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늦은 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로 남아서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서명을 하게 된다. 마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어오고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폭력’이었고, 이 때문에 찬성했던 주민들도 ‘반대’임을 선언하게 된다.

<연구자> [前 마을회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켤당이신데 이런 이야기해도 되나?

<사례 9> 해도 돼. 해도 돼. 지금 제사도 같이 안 먹는데. 명절날 오지도 안하고. 나는 처음에는 해녀들 회의 할 때도 가만히 있었어. 마음 속으로는 ‘아, 바당 이렇게 배우는 건 이건 아니다(아니다)’ 이렇게 했었지만은 겉으로는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희 삼촌이 그렇게 하는데 나서지 말라” 했었지. 그런데 ○○○[前 마을회장 이름]이 “나는 □□□[前 마을회장의 조카이자 <사례 9>의 아들]이를 모른다” 했다고 그랬지 님아.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건 아이로구나(아니구나). 나는 반대다’ 하게 된 거.

해녀인 <사례 9>에게 있어서도 ‘반대’임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켄당 관계인 前 마을회장이 그 관계들을 부정하는 순간이다. <사례 9>는 군사기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마음 속으로는 “이건 아니다(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켄당관계에 있는 사람이 찬성에 앞장서고 있으니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고, 반대를 하고자 했던 자식들을 말리기도 했다. 그런데 그 켄당이 자신들을 “모른다”라고 부정하는 순간 <사례 9>는 “나는 반대다”라고 ‘선언’하게 된다. 이는 <사례 9>가 살아왔던 경험, 역사, 믿음, 이 모두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 맥락에서 ‘반대’라는 선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에 제동을 걸고 이에 저항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반대’임을 선언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군사기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눈 앞의 관계, 살아온 경험과 역사가 부정되는 폭력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곧 이은 8월 10일, ‘바당’마을에서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해군기지 유치청원서를 제출한 前 마을회장을 해임하고, 신임 마을회장을 선출했다. 또한 열흘 뒤인 8월 20일, 해군기지 관련 찬반 주민투표를 개최해, ‘바당’마을의 유권자 약 1,200명 중 725명이 참여하여, 투표결과 94% 반대로 마을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확정지었다. 마을 내의 여러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바당’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 주민들 사이의 관계란 친척이자, 수놓음²⁶⁾을 함께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노

동력이자, 평생을 함께 지내야 할 이웃이다. 관계가 곧 '자신'인 것이다. 군사적 폭력은 그런 관계를 붕괴시켰고, 더불어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도 붕괴시켰다. 그리고 "누구의 켤당, 누구의 갑장"과도 같이 이웃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찬성'과 '반대'라는 이름표를 붙이게 되었다.

친구하나 해녀 하나를 친구를, 죽지 못해 사는 친구가 있어. 서로 비밀 말도 하고 서로 인자 지 애기도 친 애기처럼 생각하는 해녀가 있는데 그 해녀하고도 지금 말을 안해. 내가 [해녀의] '해'자만 들어도 이가 갈린다. 그니까 좀 참자 우리가. 우리가 돌아[반대]로 돌아오라는 말] 그래도 가이(개)가 단체[해녀회]니까 마음만 반대여도 안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가이(개)를 잘라 부렸고. 올해 5일계라는 게 있었어. 그것도 해녀가 두서너 명이 있어. 그것도 '반대'가 많아도 해녀가 보기 싫어서 그것도 잘라 부렸어. 그 계는 한 30년 된 계를 들어가서 노인네들 파토시켜 부렸어. 하지마라. 이런 친목을 해도 한 사람도 우리한테 안 오는 데, 동네에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는데 무슨 해녀들 들은 계를 해야겠느냐, 잘라버렸어. 그것도. 얼마나 아픈 상처. 다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 후로 동네가 서로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되지, 인자. 옛날에는 지나가도 "한 잔 먹자, 밥 먹었냐, 커피 먹었냐. 야 언제 일하젠? 나 가서 일해주젠?(내가 가서 일 해줄까?)" 그런 말을 했던 동네가 이제는 서로 저거 들하고 같이 일하면 성질나니까 눈치 보며 같이 일하기 싫어. 그 정도라. 일도 갈라져부러. 제사도 안먹으러 가지. 갑장네 잔치도 안먹으러 가지. 아무리 받을, 미강(굴)을 못따서 썬어부러도 난 찬성측 손은 안 빌주게. 그 정도로 이제는 엉어리가 진거라. 이 엉어리를 풀 사람은 단정부지. 이거를 어떻(어떻게) 풀거라. <사례 5>

이렇게 찬성-반대의 이분화된 도식으로 새로 짜여진 마을은 철저히 분리되어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바당'마을에서의 군사기지란 불

26) '수눌음'이란 육지에서의 '품앗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농경을 비롯하여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노동력을 교환하는 형태이다(남석진, 1989: 205).

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유치신청’을 통해 들어오게 된 것이므로 반대주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찬성주민들에게 돌리게 된다. 이로써 자취가 감춰진 폭력에 의해서 주민들은 분열되고, 군사적 폭력은 자신의 존재를 감출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책임을 찬성주민들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민들에게 있어서 마을주민 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으며, 그것을 파괴한(보이지 않는) 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주민들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현혹’된 것, ‘동원’된 것으로 지칭하였는데, 이 말은 역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들 ‘뒤에’ 권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그것이 현재의 자신들보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에 의해 조정될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 이야기 속에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 내 생각인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내 생각’임을 강조해야만 내 생각일 수 있는 상황, 즉 자신의 견해를 목살시키고 포섭하는 ‘뒤의’ 더 큰 힘이 있을 것이라는, 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 것이다.²⁷⁾

보라[연구자 이름]도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당사자가 아니니깐 몰라.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절대 몰라. 자다 깨나면 이 생각백엔 안나. 자다 깨도. 하.. 이거. 참.. <사례 19>

<사례 19>의 이야기 뿐 아니라 주민들은 연구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하였는데, 이런 폭력에 대한 감각은 <사례 19>가 지적한 것처럼, ‘바당’ 마을의 ‘주민’이어야만 인지될 수 있는 감각이다. 이는 그만큼 군사적 폭력

27) 대표적으로 <사례 5>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니 우린 그저 영(이렇게) 생각대로 우리 누가 와서 ‘너 똑(꼭) 반대해싼다(반대해야 한다), 찬성해싼다, 허고 [기지가] 뭐가 좋으나’ 라는 질문 걸은 것도 안해잉. 누가 그래도 ‘반대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냥 나 생각에는, 이전 나 생각으로만 이적거정(이제까지) 밀고 나간거라잉. 밀고 나간게.”

이 철저하게 내부화되어 일상적 삶 그 자체를 파괴하고 있고 이는 오랫동안 살면서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정부분 번역불가능한 경험임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이렇게, 비가시화된 군사적 폭력은 그 원인을 철저하게 내부(주민)의 문제로 돌린다. 그것이 대부분의 '기지문제'가 국가-反국가(주민)의 구도로 형성되어 온 기존의 지역들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고유경, 2005)과는 다른 점이고, 이것이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땅-바다에 대한 주도권의 전도

'바당'마을의 해군기지는 초창기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이후에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은 이러한 군사적 폭력이 작동하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과 땅-바다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2.30년 못하지만은, 이 서귀포 수역관내에서는 '바당' 어촌계가 제일 면적이 넓어요(넓어요). 지금 해군기지 들어왔다 해도, 우린 어느 정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 기지 안에만 작업 못하지. 그러니까 해군기지는 10만평이기 때문에 10만평을 떼줘도 우리는 얼마든지 작업[물질]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작업해서 밥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군기지를 유치하라고 했고. <사례 10>

군사기지가 처음 '바당'마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해군본부에서는 총 10만평(바다 매립 6만평, 부지 매입 4만평) 규모의 기지를 발표하였다. 삶의 양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일부의 변형을 통해 돌아오는 수익에 대한 기대는 주민들과 땅-바다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도 한다. 주민들에

계 있어서 땅-바다는 농사짓고 물건²⁸⁾을 채취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소득원이자 주민들 관계의 매개이자 삶의 터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연은 삶의 자원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간(cultivation)해야 할 투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군사기지가 한정된 영토 내에만 들어선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이 환영했던 터였다. 기지의 규모가 확정되어 있고, 이것이 주민들에 의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면 자연은 당위적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떼 쥐도 될” 교환가치를 지니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지설계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해군기지는 바다 매립을 더 늘려 총 12만평으로 확정지어지게 되었다.²⁹⁾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군사기지라는 것은 지금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확장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시설이며, 그것은 토지 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군사기지와 땅-바다에 대한 의미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첫번째 기지가 들어오면 [손으로 가리키며] 이만~큼만 들어온다 했어. 그러다가는 8만평에, 12만평에, 15만평에, 18평에 해내니까닌 우리가 모양이 되싸져부렸던거야(뒤집어져버린거야). <사례 13>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기지가 들어왔다 하니까, 바다 몇m 매립해서 한다하니까, 경허면 뭐 그때는 기지가 뭔지도 모르니까, 바당에 하는 거니까는 (나는) 바당에 관계도 어서(없어). 나는 해녀도 아니니까. 갈 일도 없고, 허니까. 바당하는 거는 해도 괜찮아, 나 생각에잉. 그렇게 해서 허든가 말든가 관심을 아이(아니) 둔거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뜨이 책자[기지 홍보 책자] 나오기를 받도 얼마 들어간다. 계난 1차분으로 우리 밭이 들어가는 거라. 1차분으로. 이제 만약 기지

28) 해녀들이 바다에서 채취하는 성게, 전복, 소라 등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

29) 해군본부(2007), “해군기지 사업추진계획”.

가 들어온다면은 우리 받은 1차분으로 들어가게 돼서. 계난 이제 어떤 사람이 영(이) 받은 우리 큰딸이 영자[가명]라. “영자어명네 받은 들어가도 좋우파?” 허난(하니까) “무사(왜)? 들어간 좋아? 난 반대하켜, 우리 받 들어간다 허면”. 경헨(그래서) 나가 반대하게 된 거라. 바당만 호끔만(조금만) 요렇게만 들어가불면 난 내불지, 난 진짜. 경해신디(그랬는데) 바당만 호캠(조금) 해봐단(해봤다가), 이척도 고랐지만은(이번에도 말했지만은) 요만이 허켄하당(한다고 했다가) 또 요만이 허켄하당 요만이 널케게가난(넌혀가니까), ‘아 이제는 조금만 이제 시작만 해면은 점점 넓히는구나, 이러면 안되겠다. 우리 발만 들어가도 좋은데, 나중에는 어떻 될거라.’ 경한 생각을 했지 님아(그런 생각을 한 거 같애). <사례 4>

기지의 확장은 땅-바다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초창기 군인들이란 추상적인 ‘관광객’이거나 ‘소비자’였다. 그것은 곧 이들이 마을에 들어온다 해도 그것은 ‘방문’의 맥락이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결정권은 주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때문에 한정된 땅에서 주민들이 관리가능한 수준이었다면 군사기지는 건설해도 괜찮은 것이었다. 그러나 군인들이 땅을 둘러싸고 자신의 계획에 따른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추상적이었던 대상이 구체적인 의지(will)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의지가 강화될수록 자신들의 존재와 권한이 부정될 수 있을 거란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편, ‘바당’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는 자기 명의를 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알음알음으로 얻은 땅에 소작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땅을 조그맣게라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로 돌아서게 된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군사기지로 인한 폭력은 인맥과 관계로 유지되었던 마을을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효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제주도 전체가 돌아가는 건 거의 외지인 소유예요. 땅이. '바당'도 마찬가지고. '바당'주민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팔고. 근처에 해안에 받은 꽤 많이 외지인들한테 팔린 상태고. 지금 해군기지 예정지는 외지인 소유가 한 절반 이상 될 겁니다. 여기 주민거 반, 외지인 반. 외지인이라는 건 무슨 뭐 부동산업자나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 살다가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다보니까 처분을 바라고. '바당'이 유원지로 묶여있어 가지고 땅 거래 자체가 안되니까 이참에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사례 1>

특히 <사례 1>의 지적대로 해군기지 예정지만 놓고 보아도 외지인 소유가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땅이 없는 주민들은 기지를 '유치'라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지의 확장으로 인해 '반대'로 돌아선 주민들을 이 '찬성'주민들을 "건달" 혹은 "마을 팔아먹은 놈(매향노)"이라는 비난을 하게 된다.

[찬성주민은] 한 평도 없는 것들이. 땅 가진 사람들도 결사반대 하고 있잖아요이. 뭣도 모르고 막 오는게 좋다고. 대환영한다고 현수막 붙이고 그렇게 해놨주. 이거는 매향노인거주. <사례 8>

이렇게, 군사적 폭력은 땅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만들어내고, 주민들을 이러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 내의 유대는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고, 폭력의 원인(국방력 강화와 이를 현실화할 군사기지 증설)은 제거된 채로 주민 안에서 상대방을 향해 도덕적 비난을 하게끔 한다. 이것이 '바당'마을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폭력의 핵심이다.

3. “자치도야? 망치도지” : 자율권을 박탈하는 ‘자치’

군사적 폭력은 제주도 내의 일상적 권력체계와도 연결된다. 제주도는 2001년 ‘No Visa, No Tax’를 내세우며 외지자본과 관광객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되었고, 2005년에는 국방과 사법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일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체계를 바꾸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제주도를 ‘전환’과 ‘새 시대’라는 말로 수식하는 담론들이 현격하게 늘어나기도 하였다(송상순, 2002; 김진호, 2000; 양길현, 2006).

그러나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아직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검증할 수 없었던 자치도 체제는 군사기지 건설문제로 인해 그것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때의 ‘자치’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율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토대가 갖춰져 있지 않고 외형만 바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반복한다.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한·아세안 제주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제주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했고, 2014년 제주 서귀포시 ‘바당’마을에 들어설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을 거론하면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업이고,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복합시설로서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³⁰⁾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아세안 제주특별정상회의의 참석 차 제주도에 방문하면서 한 이야기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서울 핵심부처의 관계자들은 제주도에 한 번 씩 내려올 때마다, 도내의 가장 쟁점적인 사안에 대해 ‘확정’을 내리는 ‘선물’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제

30) <제주의 소리> 2009년 6월 3일자 기사. “李 대통령, 해군기지 언급 ‘어떻게 나왔지?...’설왕설래” 참조.

주도 내 기관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주고 갈까?”라며 으레 대통령의 ‘한 마디’에 주목한다고 한다. 제주도가 ‘자치’를 한다고는 했지만,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는 정치형식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인 것이다.

또 한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군사기지 건설문제로 인해 특별자치도 체제라는 것이 실제 무엇을 향해 ‘열려 있고’, 무엇과의 대비를 통한 ‘새로움’ 인지를 깊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특별자치도가 지금 서귀포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거가 그런거라. 여기 사람들이 [자치도 전환을] 찬성해가지고 그렇게 된거 아니냐. 왜 그거를 했느냐. 이상한 것만 밀어붙이고. 여기 사람들도 제주시 가서 1년 살면 여기 내려오지 안해. 절대. 대학도 여기서 통학하는 생각하는 애 절대 없다고. 한번 제주시에 가면 여긴 안 오지. 못 살지.<사례 11>

<사례 11>의 지적처럼, 특별자치도 체제로의 전환은 ‘바닷’마을 뿐 아니라 서귀포 주민들에게 하나의 기회였다.³¹⁾ 그러나 군사기지 문제를 통해 경험하게 된 현재의 자치도 체제는 “이상한 것만 밀어붙이는” 행정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곧 ‘유치’로 대표되는 제주도정의 정치방식에 대한 비판이자, 이것이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귀포에 도움되는 것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도지사라는 직위는 특별히 공·사 두 가지 영역의 정치를 다 잘해내야 하는 위치이다. 이를테면, 도지사는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출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정도이다. 지역의 정치가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띄기는 하지만,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모두가 알고 보면 썬당”인 관계망으로 인해 이런 방식의 정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도지사의 권력은 형성

31) 특별자치도 체제는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되고 유지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 도지사가 자치도 체계로 바뀌면서 “제주도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유치’를 통해 ‘자치’하고자 하는 도의 개발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되었다. 자치도 체제로 전환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제주시·서귀포시의 시장직이 투표에 의한 선출직이 아니라 도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기초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연구자와의 인터뷰 당시 군사기지담당 공무원이었던 <사례 B>는 군사기지 ‘유치’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8년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되어 2009년 현재 재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주민들의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제도적 틀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비공식적 통로도 함께 잃게 되었다.

지금도 계약직 하나 채용하는 것도 그런일까지 전부 저 태환이[제주도 도지사] 결재 아니면 없어. 시장이나 개발공사나 거기 사장 누구냐 그 사장 맘대로 못해. 맘대로 절대 못한다고. ‘바당’에 삼다수 근무하는 아이도 하나 있는데, 김태환이 아니면 계약직도 절대 못 들어간다고. 우리 반대측 도와주는 관(官)이 하나 없지. 전부 적대적이고. <사례 19>

변화된 자치도 체제는 <사례 19>의 지적처럼 도지사의 권한이 일개 기업의 “계약직 한 자리”로 대변되는, 아주 미세한 곳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권력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대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말할 공간을 점점 박탈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례 4>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도지사도 우리 가면 만나줄경. 해결해 줄경 해도 가면은 도망가불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사례 13> 그니까 요작이(요번에) 데모 갈 때도 있잖아. 우리 그걸로

만 생각해보면 될거 아니. 다섯 발자국 물러서나멘(물러서면) 기자회견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섯 발자국 물러서나니 기자회견 못하고 [공무원들이] 역적모의했잖아. 역적모의 하니까넌 또 열 발자국 물러서나멘(물러서면) 기자회견 해주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 생각엔 그거는 영(이렇게) 된거 아니야. 우리는 동 굴럼드레 물러쳐놓고 이제 데모를 해도 우터레(위에) 올리지 못한다[제주도청 안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한다는 뜻].

<사례 4>와 <사례 13>은 해군기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있는 날(2008년 9월, KDI발표) 진행된 항의 시위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통해 현재 도청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은 기지건설 철회 요구하는 과정에서, “만나줄경 만나줄경 하면서도 세 발자국, 열 발자국 물러나게끔”하는 권력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데, 전술한 대로 한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제주도에서, 표면적으로는 저항하는 주민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한다.³²⁾ 때문에 주민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하지는 못하고 눈 앞에서는 끊임없이 “만나줄경, 해결해줄경”이라는 약속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약속은 갈등적인 상황을 무마하는 방식으로서만 활용되면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제주도청에서는 “국책사업을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선전을 하고 있었지만, 후에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국책사업이니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음”을 들어

32) 대표적으로 <사례 12>는 도청 앞 집회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도청 앞에서 순경들 사람으로 해가지고 바리케이트 쌓았을 때, 우리 천막 농성할 때 나도 그날 문밖(전부) 까지고 했는데, 그 앞에서 순경들 잡고 막 할 때 나중에 도청 직원 인데 가이(개)가 나를 막 [위로] 올리는 거야. 나도 그때는 막 흥분이 된 상태기 때문에 몰라봤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 개가 군대 동기라는 거야. 나 동기, 이름 누구라는 거야. 그래서 싸울 것 같으니까 나를 뒤로 끄집어 내가지고 바깥으로 같이 나온거라. 경하고(그렇게 하고). 또 경찰에 정보과 직원 중에 아주 가까운 사둔빨 되는 젊은 아이가 있어. 데모할 때는 나 주위만 맴돌아. 혹시나 싸우다가 다칠까봐 해가지고.

기지 건설을 강행하였다. 도 내에서는 여론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라는 정치적 명분은 취하고, 저항에 대한 책임소재는 국가에 떠넘김으로써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공간의 공백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의 시위 도중에 나온 "자치도야? 망치도지"라는 이 말은 주민(제주도민)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서의 '자치'를 말하는 모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인 것이다. '유치'를 통한 '새로운 삶'은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의 말을 차단하고 있었다.

V. '주민됨' 의 의미 생성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군인들은 이들을 '국민', '주민', ('소비자'로서의 군인과 상응하는) '생산자' 등으로 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착이 마무리될 즈음, 자신들의 정당화 작업에 도움을 주었던 애초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버린다.

<제주 환경부지사> 악수(惡手)만 두지 않으면 해군기지 사업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자.

<해군 통제실장> 찬성 측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 자치행정국장> 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모양새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지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이다.

<국정원> 제주지검 관계자에게 불법행위, 폐쓰기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겠으며, 외부 개입 세력에 대해서는 찬성 측에서 문제제기 하면 국정원과 경찰이 측면에서 지원하겠다.

<경찰> '바당'마을의 순수 주민과 외부단체 세력의 격리가 중요하며 신문 광고에 대해서는 반대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쉬운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도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고소고발 해줘야 경

찰도 조치가 가능하며 인신 구속 등이 있어야 반대 수위가 낮아진다.
 <서귀포시 ○○동³³⁾장> 반대측 젊은 사람들이 주동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다.

<제주 환경부지사> 분열은 좋은 상황. 공세적 법집행이 필요하다. 이제
 는 추진단계이므로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 해군이 주도해서 공
 세적으로 할 것을 주문.³⁴⁾

이 회의록은 해군기지에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 회의된 내용이 한 방송에
 입수되어 공개된 자료이다. 이를 통해 보면 이들은 주민들의 저항을 “불법
 행위, 떼쓰기”, “인신 구속”, “분열은 좋은 상황” 등의 말로 모든 상황을 표
 현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주민들을 주체화하였던 모든 언어들에 경계를 드
 러내면서 기지에 반대하는 주민 자체를 “제거해야 할 걸림돌” 정도로서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세
 적 법 집행”이라는 구체적인 위협을 동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주민
 들은 경찰·군인·도청이 모두 위치는 다르되, 하나의 권력을 형성하고 있
 음을 알게 된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은 영토도, 국적도 갖고 있으나, 그럼에
 도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과도 같은 지위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절차와 민주주의를 지켜라”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들의 요구는 결국 국민국가 안에서 제주도민으로서, ‘바
 당’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성원권을 인정하라는 호소이다. 즉, 이는 “걸
 림돌 같은 존재”에서 국민국가의 성원으로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말인 것이다. 이 요구는 4.3사건의 사적화된 폭력과도 겹쳐진다. 그리고 이
 렇게 뚜렷한 외부가 존재하지 않고 내부화된 폭력의 형태는 4.3의 기억을
 다시 불러들이면서(re-call) 현재 자신의 위치를 “물 막아진 곳에 살아 당
 한 억울함”으로 자리매김한다.

33) ‘바당’마을의 행정동명.

34) 제주KBS 뉴스9, “해군기지 유관기관 회의록 단독 입수”, 2009년 1월 19일자 보도.

우리 아버지가 9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태자 영자 [가명]인데, 하루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날 여기서 죽는 날 호호방문 하면서 문 열고 이 청년들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운태영이 있느냐'. 우리 아버지는 그때 중문 면역소. 지금은 면사무소 그때는 옛날말로 면역소 면역소 했거든. 면사무소도 그때 산사람들[무장군을 말하는 것]이 내려와서 태와버리고(태워버리고) 그럴 때거든. 면사무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출역을 나갔어. 일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버리고 진짜 태영이는 따라 갔는데, 그때 이서시면(있었으면) 죽었지. 나중에 태영이란 사람은 죽었어. 호호방문하면서. 그디 홍○○라는 사람도 나가 알기로는 천하 오정백[건달과도 같은 의미]이야. 그냥 남의 일 날품팔이 하고 살고 기운은 장군인데. 아 문 열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디서 썩버리고. 그.. 그것이 이제 와서 생각하면은, 아 그거 왜 그랬을까 그거이. 그니까 그게, 제주도가 물 막아져가지고. 과연 육지 같았어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해서(했어). 그것 참..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 한참 후에도 53년도에 금족령이 해지되고 살면서 이제 그 가해자 피해자 자손들끼리도 한참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자손들도 약고 또 그 당사자들도 죽고 하니까 얘기들도 무마되가지고 해갔지. 되가다가 이 해군기지가이 나가지고, 나 그때 이게 만일 총칼 있었다면 틀림없이 더 했어. 반 이상 죽었어, 지금. 지금 그랬는데 총리실에서 해군기지 말아가지고 한다하니까 총리실에 메일을 보냈어. 거기 보내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국방부 듣기 싫어서. 전부 김○○[해군 중령 이름] 같은 놈 거짓말 한거 내가 적었거든? 우리 의례회관에 와가지고 말이야 “발을 안팔아주면 바다를 폐위해서 할 것이고”.. 저 찬성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발 얼마나 주겠습니까?” “100만원까지 주겠소”. 이런 놈이 해군 중장이라니 말이 되느냐 말이야. 거 다 읽어봤을 테지. 그거 총리실 자기네가 답변하는게 곤란하니까 국방부에서 보내분거야이. 국방부 중령인가 하는 놈이 “국책사업이라는 거는 주민투표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바당’사람들과 얘기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거여. 4.3 보담도 이게 큰 일이

여. 4.3이 문제가 아니며,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아. 4.3 보다 더한 뭐가 이런 광경에 처할 거가 있구나. 우리 오래 못 살어. 스트레스 쌓여서 오래 못 살어. 우리 할망도 그렇고. <사례 19>

“과연 육지 같았어도 그랬을 것인가”라는 <사례 19>의 탄식은 총리실, 국방부, 청와대비서실, 국회의원 사무실, 제주도청 등의 국가기관에 끊임없이 민원과 탄원서를 넣는 정치적 행위로 이어진다. 이는 항상 사사로이 취급받았던 자신의 존재를 공적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폭력이 ‘공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 이 문제가 ‘국가’에 의한 것이라는 것 등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였던 것이다.³⁵⁾

또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국회부대조건을 지키라”³⁶⁾는 요구를 해 온 것인데, 그럼에도 ‘바당’마을의 주민으로서, 법을 준수하라는 요구 자체가 불법³⁷⁾이거나 내쫓김을 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법 집행에 있어서의 상반된 집행의 방식은 배제되고 주변화 되어 온 이들의 ‘보편성’ 주장이 종종 모종의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을 생산하게 됨(버틀러, 2008)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수행적 모순을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정치적 자원으로 삼는다면,³⁸⁾ 군사적 폭력이 주민들을 반드시 필요로 했으나 궁극적으로 이들을

35) 주민들은 해군기지와 관련된 문제를 ‘공식화’하기 위해 서울에 수 십 차례 올라와서 국회와 국방부를 방문하기도 하고 탄원서를 넣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일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36) 2007년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제시된 “해군기지 건설예산 부대조건”이란 ‘제주 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 협의의 거처 집행한다’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국회 부대조건에서 제시한 ‘제주도와 협의’는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37) 마을주민들은 현재 찬성주민들과 도청, 해군측으로부터 7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며 주민 7~80명이 연루되어 있다(평균 1인당 1.5건 수준).

38) “이러한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야말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다시 쓰게 하는 가능성을 만든다”(주디스 버틀러가 야트리 스피박, 2008: 66-7).

지우고자 했다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민됨'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법적 형식을 빌리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법은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바당'마을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을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을 가진 주체로, 강압이 아니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 문제를 밀실합의가 아니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국가(서울)와의 관계에서 '바당'주민이 협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제주간의 거리감이 극복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사투리는 '번역'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거기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공재(共在)하는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³⁹⁾

이는 주민들이 '주민됨'의 위치를 빌어 국가의 소속양식에 질문하는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 즉, 주민들은 법 밖에서 "모든 법은 필요없다"거나 "어짜피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법의 사용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의 내부에 있으면서 그 사용영역을 확장시켜 마을 밖 '우리'로 하여금 그 용어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 그리고 어떠한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당'마을의 '주민'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은 제주도민의 문화와 역사라는 문제를 정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 그 속에서 '제주도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도록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39) "서울은 바로 국가로 통하기 때문에 행정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 외의 다른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지방정부, 특히 좁은 제주도는 도지사나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것이 특이한 점"이라는 연구자의 말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인 <사례 C>는 "국가는 너무 멀어"라는 한 마디로 대답하였다. 이렇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국가(서울), 물리적으로는 비행기를 타야만 도달할 수 있는 460Km의 거리, 서울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번역'을 거쳐야 하는 제주도말, 항상 좋아 보이는 '관광지'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각 등의 인식을 주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VI. 결론을 대신하여: 평화만들기의 정치학

본 연구는 군사기지건설 예정지인 제주도 '바당'마을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해,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험·역사·사회경제적 조건 등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지는 폭력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추상과 당위로서만 존재했던 기존의 평화 개념을 구체적인 장소에 기반한(place-based) 주민들의 삶의 논리를 통해 재의미화 하고자 하였고, 이를 평화만들기(peace-making)의 정치학으로 위치짓고자 하였다.

주민들은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주민 자신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극복 혹은 부정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민됨'의 위치에서 국가의 소속양식과, 삶의 장소성(placeness)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지금-이곳'에서 작동되는 폭력에 의해 주민들의 신체와 땅-바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평화'의 개념은 이미 존재하거나 주민들에게 내재(內在)된 것 아니라 인식과 발견의 산물이며 과정적인 의미로서 위치지워질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바당'마을에서 군인들이 말하는 "지금의 군대는 옛날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현재 작동되고 있는 폭력의 특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바당'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옛날"의 폭력과는 다르다. 때문에 "옛날"에 일어난 폭력이 복제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폭력은 새롭게 드러나고 인식된다. 폭력은 특정한 시·공간에 따라 상황적으로(situationally)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여성주의 평화연구에서는 남성들의 핵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징집, 군대, 전쟁 등의 메커니즘이 성별화된 구조를 은폐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전쟁-평화의 허구적인 이분법을 깨기 위하여, 일상화된 전쟁(폭력)의 구조의 작동방식을 드러내면서 일상의 곳곳에 배어있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진행된다면 될 수록 군사적 폭력의 힘은 '우리'를 얽

매이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서 위치지어졌고, 이는 '우리'를 더욱 약자화 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⁴⁰⁾. 그리고 이런 구도는 더 이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한동안 담론의 정체를 겪기도 하였다. 군사주의 비판담론이 폭력의 형태를 고정된 것으로 봄으로써 이를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했고, 한편으론 폭력을 더욱 미시화된 권력의 형태로 분석할수록 이를 탈출할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런 정체와 무력감은 사실상 이러한 논리구조가 갖는 예정된 결과이기도 하다.⁴¹⁾ 이렇듯 평화가 폭력과의 관계 속에서 잔여범주(residual)로 구성된다면 평화를 수동적이고 규범적으로 정의되었던 기존의 위계화된 이분법적 담론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폭력(을 비롯한 모든 권력)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생산되고 작동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것과, 그 일상을 구축하는 '군사적 폭력'이라는 것은 다시 정의되어야 하며, 그것은 특정한 시·공간에 근거한 경험을 통한 것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언제나 실험용 쥐와 같은 실험대상이었다"는 제주의 한 시민사회활동가의 말처럼, 이러한 변화된 폭력 패러다임의 최전선에 제주 '바당'마을이 있고, '우리'가

40) 특히 독재정권에 대한 경험과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징병제로 인해 '강력한' 군사주의적 사회라고 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인식은 이러한 분석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41) 본 연구자가 2005~6년까지 속해 있었던 소규모의 페미니스트 평화그룹에서는 해소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그룹을 지속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이유를 공유했다. 하나는 군사주의 비판담론을 생산하면 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미시적인 권력망으로 인해 담론의 생산자가 무력감에 빠진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장(field)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국가·남성중심적인 담론과의 투쟁은 구체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는 사실상 하나의 문제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는 폭력, 국가, 남성 등의 범주를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범주를 더욱 추상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화가 가능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들 권력의 효과와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은 곧 국가로 통하고, 이는 보편으로서 편재(遍在)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없는 공간(placeless)으로 위치지워지기 쉽다. 그러나 군사적 폭력은 '바당'마을이 '적정지'가 된 것처럼 국가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군사주의 연구는 땅-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place-based)에 대한 사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구갑우(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후마니타스.
- 김은실(2002), “지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19집.
- _____ (2004), “지구화 시대 근대의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변화하는 여성문화 움직이는 지구촌』, 푸른사상.
- _____ (2008), “조선의 식민지 지식인 나혜석의 근대성을 질문한다”,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양길현(2006), 『평화번영의 제주정치』,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총서 3, 오름.
- 우석훈(2008a), 『촌놈들의 제국주의』, 개마고원.
- 정연신(2008), “오키나와의 기지화·군사화에 관한 연구”, 정근식 외 편저,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치사회학 제1권: 기지의 섬, 오키나와』, 논형.
- 조성윤(2008), “고난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역사비평> 2008년 봄호 (통권 82호).
- 강상중·요시미 순야(2004), 『세계화의 원근법: 새로운 공공공간을 찾아서』, 임성모·김경원 공역, 이산.
- 다나 해러웨이(2002),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옮김, 동문선.
- 래나토 로잘도(2000), 『문화와 진리』, 권숙인 옮김, 대우학술총서 483, 아

카넷.

- 메릴 윈 데이비스(2005), 『인류학- 하룻밤의 지식여행』, 정해영 옮김, 김영사.
- 아리프 딜릭(2005), 『포스트 모더니티의 역사들 : 유산과 프로젝트로서의 과거』, 황동연 옮김, 창비.
- 주디스 버틀러(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2008), 『누가 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혜연 옮김, 산책자.
- 켄 실버스타인(2007), 『전쟁을 팝니다』, 정인환 옮김, 이후.
- 피터 W. 싱어(2005), 『전쟁 대형 주식회사』, 유강은 옮김, 지식의 풍경.
- Fabian, Johannes(1983), *Time and the Other: How Anthropology Makes Its Object*,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 Man, Paul(1983), *Blindness and Insight: Essays in the Rhetoric of Contemporary Criticism*, second edithion, revised, with an introduction by Wlad Godzich,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scobar, Arture(2001), *Places and politics in an age of globalization /* edited by Roxann Prazniak and Arif Dirlik,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 Dirlik, Arif(2001), *Places and politics in an age of globalization /* edited by Roxann Prazniak and Arif Dirlik,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 Griffiths, Gareth(1994), "The Myth of Authenticity", in *De-Scribing Empire: Post-Colonialism and Texuality*, ed. Chris Tiffin and Alan Lawson, Lodon: Routledge.
- Brydon, Diana(1991), *Past the Last Post: Theorizing Post-Colonialism and Post-Modernism*, ed. Ian Adam and Helen Tiffin,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 Cohn, Carol(1987), "Sex and Death in the Rational World of Defense Intellectuals", *Signs*, Vol.12, No.4.

<신문 및 방송 기사>

“친환경 관광 미항 기능 갖춘 세계적인 해군기지”, 『국방일보』, 2008년 4월 2일자.

“해군기지는 ‘친환경 관광 미항 기능 갖춘 세계적인 해군기지’”, 『국방일보』, 2008년 4월 2일자.

“李 대통령, 해군기지 언급 ‘어떻게’ 나왔지?...‘설왕설래’”, 『제주의 소리』, 2009년 6월 3일자.

“해군기지 유관기관 회의록 단독 입수”, 『제주KBS 뉴스9』, 2009년 1월 19일자 보도.

<기자회견 및 토론회 자료집·보고서>

고유기(2006), “군사기지, ‘기회의 역사’로 거듭나는 제주미래의 중대한 도전 - 제주도 군사기지”, 『2006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삼성(2007),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넘어서: 제주-오키나와-타이완의 동아시아 평화벨트를 상상하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코리아연구원 주최, 「대안적 동북아 평화구상과 ‘평화국가’ 만들기」.

이서향(2002), “국제자유도시와 안전보장”,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해양 안보』, 해군본부 주최, 「제9회 함상토론회」.

장정길(2002), “동북아 해로에 있어서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해양 안보』, 해군본부 주최, 「제9회 함상토론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2005),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해군본부(2007), “해군기지 사업추진계획”.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2010), 「SIPRI ARMS TRANSFERS DATA, 2009」.

The Peace-Making Politics in the Contestations of Discourses on Military Base in Jeju Island

Lee, Bo-Ra*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raise a question on the method and viewpoint that the concept of violence and peace is interpreted from the standpoint of local people. So far, studies on military violence(militarism) have generally focused on sufferings caused by power, authority, contamination, etc. viewing 'violence' itself in the context of militarism, male chauvinism, and mechanism of mobilization and exclusion. Therefore struggles against violence have been narrowly assessed in the way of 'witnessing' suffering("victimized people") or calling victims as political subjects("true peace"). And the concept of 'peace' established through these ways has become to mean only keeping, not spoiling something they originally have.

However, the frame of violence and suffering from this point of view was a bit pre-given and per-determined. This kind of analysis has been possible since military violence in Korean society was based on experience originating from military dictatorship, conscription system,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etc. But military violence in 'Badang' Village in Jeju island was being developed through the way of guaranteeing 'a better life', rather than using traditional carrot and stick, and military base was also being regarded as 'development facility', not

*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as 'abominable facility'. In order to understand this situation that 'Badang' Village competed with other regions to 'attract' military base, we needed non-conventional, new frame of analysis, and the concept of violence and peace had to be redefined and reconstructed as peace-making process.

I intended to prove that military violence is not fixed and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since 2000 and also peace isn't inherent, and rather the product of recognition and finding.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statement "Present military is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past" that military personnel used to mention exactly reveals the character of violence functioning in 'Badang' Village now. What happens in 'Badang' is different from the 'past' violence. So, violence is freshly revealed and recognized where 'past' violence cannot be copied as violence is functioning situationally in the specific time and pla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lucidate how the local people's body, the land and sea, and their identity is redefined and recognized. That's the reason why we should take notice of the political context under the specific time and place, so to speak, the placeness, in speaking of violence.

Keyword : military base, militarism, violence, placeness, peace-making

논문투고일 2010. 01. 18

심사완료일 2010. 02. 05

게재확정일 2010. 02. 15